

2026년 경찰승진 난이도 분석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1	공제회 범위 밖	2	19	9	10
2	박스 문제	3	6	7	6
3	“옳은 것은?” (박스 문제 포함)	6	13	15	14
4	숫자	16	19		

2026년 승진시험 주요 특징

1. 시험범위:

- ① 공제회 교재 범위를 준수하려고 노력하였다.
- ② 해설에 있는 법조문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등 구석에 있는 문제로 난이도를 높였다.
- ③ 공제회 범위 밖 2문제 중 1문제는 경위 공채 기출문제를 인용하였다.

2. 단순암기: 법조문 중 일부를 바꾸어서 출제하거나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다.

3. 문제 푸는 요령

- ① 지문에 ()가 있는 경우에는 ()을 잘 봐야 한다. (10번)
- ② 기간이 있는 경우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 ~날부터 또는 ~다음 날부터 (8번, 15번)
- ③ 마지막 끝말에 유의해야 한다. (예)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28번, 문제)
- ④ 경찰청장 ↔ 시·도청장 바꿈에 유의한다. (30번, 31번)

【아두스 경찰승진 경찰실무종합 해설(26.1.31)】 ※ B4 인쇄용

1.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그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해 관료주의화 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 ㉡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교통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이 이에 해당된다.
- ㉢ 행정경찰은 현재 또는 장래 사태에 대한 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일치한다.
-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 평시경찰은 평온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 (X)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과 무관한 독자적인 경찰작용이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 ㉡ (X) 행정경찰은 과거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과거)과 달리 현재 또는 장래 사태에 대한 작용이다.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경찰을 의미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작용으로서 사법경찰도 실정법에 경찰의 규정되어 있다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게 된다.
※ 행정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 ㉢ (O) 발동 시점에 따른 구분 : 예방경찰, 진압경찰 **【예진씨】**

2. 경찰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된다.
- ②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 ③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협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협의 존재를 잘못 추정할 경우 추상적 위협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④ 경찰은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하여야 한다.

정답 ③

- ① (O) 형법이나 경찰행정부 등 공법 위반은 법질서 불가침성에 대한 위반으로서 위협으로 취급된다.
- ② (O)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 ③ (X)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협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협의 존재를 잘못 추정할 경우는 추정적 위협이다. 추정적 위협은 오상위험에 해당한다.
- ④ (O) "공공의 안녕" 개념에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보호가 포함되며 무형의 권리도 보호대상이다.

3. 갑오개혁 이후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경무사를 수장으로 하는 경무청이 신설되었다.
- ② 경부 경찰체제에서는 총순이 관찰사를 보좌케 하여 이원적 체제를 타파하였다.
- ③ 1896년 한성과 부산 간 군용전신선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정답 ②

- ② (X) 경부 체제에서 한성부, 감옥, 개항 시장은 경부가 담당하고, 지방은 관찰사가 치안을 담당하여 이원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 ③ (O) 헌병경찰: 1896년 군용전신선 보호 명목으로 처음 주둔하게 되어, 1906년 통감부 설치후 헌병이 군사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으로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4.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군정 초기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일제강점기 경찰조직을 유지하였다.
- ② 1946년 1월 16일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해 경무국이 경무부로 격상 운영되었다.
- ③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고 경제경찰,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④ 1945년에는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보안법을 폐지하였다.

정답 ④

- ① (O) 미군정 초기 일제강점기 경찰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1945. 10. 21.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현 경찰의 날)하면서 일본인 경찰이 모두 추방되었다.
- ④ (X) 일제 악법의 폐지는 1945년에 정치범처벌법·치안유지법·예비검속법이 폐지가 되었고, 1948년에 보안법이 폐지되었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②

- ② (X)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은 행정안전부이지만 별도로 사무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사무는 경찰성에서 수행한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시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자격이 있는 사람
-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
- 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④ 제1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정답 ③

- ③ (X) 행정학 분야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와 관련된 자격을 요하므로 행정학 교수는 빠져 있다.

※ 국가수사본부장 자격

-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경무관 X)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자격이 있는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 교수 자격요건

대상	전공	경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법률학, 행정학, 경찰학	조교수 이상 5년
국가수사본부장	법률학, 경찰학	조교수 이상 10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법학, 행정학	부교수 이상 5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경찰 관련 학문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소청심사위원회	법률학, 행정학, 정치학	부교수 이상 5년

7.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로 구분되며, 특수경과는 운전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로 구분된다.
- ②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와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으나, 신설할 수는 없다.
- ③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정답 ④
 ① (X) 경정 이하에 대하여 모든 경과가 부여되며, 총경에 대하여는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특수경과에 운전경과는 없으며 항공경과와 정보통신경과로 구분된다.
 ② (X) 경찰청장은 전시, 사변, 비상사태에서 경과를 폐지·병합·신설할 수 있다.
 ③ (X)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8. 「경찰공무원법」상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다음 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 ②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X)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경공법 제15조의2).
 ③ (O) 경무관 이하까지 심사승진할 수 있으므로 총경 이하에 대하여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O) 해양경찰청은 치안정감이 2명에 불과하므로 치안감까지 포함하여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2계급 승진이 가능하다(법 제15조①).

9.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③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④
 ③ (O) 위임명령은 위임이 필요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집행명령은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④ (X)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9조).

10.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포함한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처분의 재심사의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처분의 재심사의 신청은 당사자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④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X) 처분의 범위에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다.
 ② (O) 제2항
 ③ (O) 제3항
 ④ (O) 제5항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 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정답 ②
 ① (O) 대판 201도11162
 ② (X) 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제4조 제2항).

12.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 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 ②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 ③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기록이 필요한 경우
- ④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답 ③

- ① (O)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이면서(이거나 X),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 ② (O) 법 제10조의5 제1항 제4호
- ③ (X)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경우(현장 기록 필요성은 제외)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집시법에 의한 집회·시위 현장이다(대통령령 제2조 제3호).
- ④ (O) 대통령령 제2조 제4호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한다.
- ㉣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 (O)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심하세요 바로 보상합니다】**
- ㉡ (O) 위원회 결정은 60일 + 20일 ⇒ 결정 통지(10일 이내) ⇒ 지급(30일 이내)
- ㉢ (X)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제10조 제5항).
- ㉣ (X)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제10조 제6항).

14. 경찰 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의 원리란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 ②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지만,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넓다.
- ③ 계층제 원리는 조직 경직화를 초래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기술·지식 등 도입이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 ④ 무니(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중시하여 조정을 목표달성과 직결되는 조직의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정답 ②

- ② (X)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넓고,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다.

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②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 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④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다음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 ④ (X)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16.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절차, 신고절차, 입법예고절차, 행정조사절차 등을 규율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정답 ①

- ① (X)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①). 여기에 **공법상** 계약과 행정 **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조는 없다】**
- ④ (O) 입법예고: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예고하는 사이(4,2)】**

17.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②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와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정답 ②

- ② (X) 의무위반에 대한 단서를 수집한 경우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찰활동 결과 의무위반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O) 의무위반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2개월 내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른 경찰기관, 검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내로 처리해야 한다.
- ④ (O) 이 경우 감찰부서장이 아닌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 ②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 원이다.
- ④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③

- ③ (X) 일반적인 공무원등은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이지만, 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은 1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19.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국경찰사에서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순으로 제정되었다.
- ②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최소주의는 윤리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율타리로 삼고 더 이상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③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④ 「공무원 행동강령」에 경찰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①

- ① (X) 경찰윤리헌장(1966), 새경찰신조(1980), 경찰헌장(1991), 경찰서비스헌장(1998), 경찰관 인권행동강령(2020) **【윤새헌서인】**

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제회 X】**
※ 2024년 경위 공채 기출 문제로 통합문제집에 기술되어 있음.
-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9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에는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
-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 ① (X)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0조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금전 관련 규정

-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고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 **상금(범인 신고·체포)은 지급해야 한다.** 보로금(압수물·금품)과 보상금(신고·체포 시 사상을 입은 경우)은 지급할 수 있다.
- 테러방지법: 신고·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1. 사회학적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머튼(Merton)의 긴장이론은 하위계층의 목표달성 좌절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고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 ②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이론은 좋은 자아관념이 범죄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가담치 않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 ③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이라는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게 되면 범죄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④ 코헨(Cohen)의 하위문화이론은 범죄를 중류계층에 대한 반항이 아닌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④

- ④ (X) 밀러의 주장 내용이다. 코헨은 중상류층에 대한 하류계층의 반항의 결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지만(반항문화), 밀러는 중상류층에 대한 반항이 아닌 하류계층만의 고유한 문화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고유문화).

22. 범죄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 입장에서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이라 주장한다.
- ②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발생 3요소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자) 부재를 들고 있다.
- ③ 집합효율성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 ④ 방어공간이론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 ① (X) 합리적 선택이론은 신고전주의 이론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한 의사비결정론적 인간관의 입장에서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이라 주장한다.

23. 「유실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 ③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 ② (X)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은 상실하고 국고에 귀속된다. **【소유권(6) 상실(3)】**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 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자
-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④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정답 ③

- ① (X) 유사강간은 미수범을 처벌한다.
- ② (X)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및 성착취물 이용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
- ③ (O)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는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다. 성을 팔도록(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행위만 미수범 처벌한다.
- ④ (X) 인신매매 행위로서 미수범 처벌한다.

▶ 미수범 처벌 **【성착취물 강매 팔도록】**

- ①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판매·대여 X), 성착취물 이용 협박
- ② **강간·강제추행** 등(유사강간, 준강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포함)
- ③ **인신매매**(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국외 이송, 국외에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
- ④ 성을 **팔도록** 강요(폭행·협박·선불금·위계·위력·업무고용 등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행위) (합의강요 X, 성을 사도록 X)
- ⑤ 영업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을 **팔도록**(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5.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없이 고소·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각하'에 해당 하는지 검토한다.
- ③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④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정답 ①

- ① (X) 경찰관은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제49조).
- ② (O)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고발 내용이 각하 사유에 해당 하는지 검토해야 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는 경우 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한 경우 소속수사부서장의 결재 후 연장 가능)에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증거, 정황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다(제50조).

26.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 ④ (X) 36시간 이내이다.

27.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청색으로 한다.
-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홍색으로 한다.
- ③ 보통 장물수배서는 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백색으로 한다.
- ④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백색으로 한다.

정답 ③

- ① (X)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이다.
- ② (X)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한다.
- ④ (X)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이다.

▶ 장물 수사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홍색용지, 수사본부 설치하여 수사하는 사건에서 발부
중요 장물수배서	청색용지, 수사본부 설치 이외의 중요사건에서 발부 ※ 중요문화재, 외교사절 관련 사건, 살인, 강도, 다액절도, 상습 침입절도 등
보통 장물수배서	백색용지, 기타사건

28.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③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폰 및 유치실을 검사해야 한다.
- ④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정답 ③

- ③ (X)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폰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제8조①).

29.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도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반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 ③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④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정답 ①

- ① (X) 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제17조⑤).

30. 「통합방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 "을중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 "방호"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 (X) "병중사태"에 대한 설명이다. "을중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 (X)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X) "통합방위"에 대한 설명이다.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31.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은 시·도경찰청장이 행한다.
- ② "공관지역"이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 ③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B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④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②

- ① (X)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③ (X) B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④ (X) 시·도경찰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분류

분류	내용
A등급	파괴 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B등급	파괴 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Busy 일중]
C등급	파괴 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시제 단상] <22승진>

▶ 점검 및 훈련

	서장	시·도경찰청장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분기(B·C는 반기)	반기
대테러 훈련	분기	반기

32. 도로교통 관련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 ③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공제회 X]**
-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정답 ③

- ② (O) 승차정원 위반은 범칙금 4만원이다.
- ③ (X) 자전거에 대한 설명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으므로 어린이(13세 미만)는 운전할 수 없다.

33.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한다.
- ③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 결과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온 직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 ④ (X)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므로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도4328).

34.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②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③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④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정답 ①

- ① (X) 주·정차금지가 아닌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 주·정차 금지 및 주차 금지 장소

주·정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횡단보도, 건물목,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승용차 과태료 8만원) · 안전지대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건물목 10미터 이내 · 기타 시·도청장이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p>오(5)소 모퉁이로 안정환(횡) 숲(10)</p> <p>※'안정환 숲'의 나머지는 5m(주차금지 포함)</p>
주차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장이 정한 다중이용업소 5미터 이내 · 도로공사 양쪽에서 5미터 이내 · 터널 안 · 다리 위 · 기타 시·도청장이 지정한 곳 	<p>오메(5m) 다공터다 (그래도 주차금지!)</p>

35.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지만,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시민사회 단체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 ④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 ④ (X)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제2조②).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4조①).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철회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최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철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③ 제6조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로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으며,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 ④ (X)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집회 경합시 절차: 서로 상반되는 집회가 같은 시간·장소에서 중복될 때, 시간·장소 분할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신고를 금지할 수 있다(해야 한다 X). ⇨ 먼저 접수한 주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서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철회 시에는 24시간 전에 신고(철회신고서 미제출 시 100만원 ⇩ 과태료) ⇨ 관할서장은 뒤의 주최자에게 즉시 통지 ⇨ 뒤의 주최자는 최초 신고한 대로 개최하거나 일시를 새로 정하여 개최 24시간 전에 신고서 제출하고 개최할 수 있다.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전 금지된 집회라면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다.
-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도 금지한다.
- ③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한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 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 ① (X)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9도13846).
- ② (O)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헌재 2000헌바67등).
- ③ (O)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2009헌바406).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②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 ④ (X)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8항).

▶ 신고 및 승인

북한 방문	남한 주민	승인	통일부장관
	재외 국민	신고(외국에서 방문시)	통일부장관 or 재외공관장
북한주민 접촉(회합, 통신)		신고	통일부장관
물품 등 반출·반입		승인	통일부장관

39.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하지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④

- ④ (X)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④). 관계 행정기관에 어떤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기관장(관청)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40.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서 발부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부
- ②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실종자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부
- ③ 오렌지색수배서 (Orange Notice) 위험물질 경고를 목적으로 발부
- ④ 보라색수배서 (Purple Notice) 범죄수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부

정답 ②

- ② (X) 흑색수배서는 변사자 신원 확인을 위하여 발부한다. 실종자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부하는 것은 황색수배서이다.